

# “지역 산재의료안전망 구축해야”

### 전북연구원, “전북, 산재전문병원 부재로 대전 등 원거리 치료로 불편 가중”… 병원 건립 필요성 제안

전북의 산재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북에도 산재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지역산재환자 증가추이와 산재전문병원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산재요양환자는 2001년 14.3만명에서 2020년 35.0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전북의 요양재해자도 2020년 기준 약 4천명으로 요양재해율이 0.70% 전국 평균인

0.5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의 요양재해율이 0.77%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군산 역시 0.71%로 광주지청 산하 지방관서의 평균재해율인 0.6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북 요양재해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의 부재로 인해 지역의 산재환자는 인근의 대전이나 서울 등으로 원거리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이동의 불편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권에는 산재전문병원(순천)과 산재전문 재활센터(광주)가 설치되어있고, 대전에도 산재전문병원(대전), 직업병 예방상담 및 치료센터(대전)가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산재전문 의료 및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산재의료인프라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은 산재병원의 부재로 인해 산재전문병원 이용률이 10.4%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산재병원 이용률인 21.4%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황에 기초해 전북연구원 이종섭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내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급성기 산재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대응력을 갖추고 지역 산재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도의 산재전문병원은 최근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해를 증가에 대응하여 농어업분야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특화 산재전문병원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경수 기자

# 서울-부산-전북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실현을

### 민주 김성주 의원 금융위에 제안… “산업 발전 발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분명한 입장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부산-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완성을 제안했다.



센터·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SSBT, BNY Mellon, SK증권, 우리은행, 하나카드서비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 등 9개 국내외 금융사무소를 유치해 금융 기관 집적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공약 사업으로 선정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치 논리에 빠져 자신용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금융위원회의 명분 없는 대응과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주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3년으로 예정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도시 발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문하며, 국제종합금융도시 서울, 선박 및 해양 파산 금융중심지 부산,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완성이 금융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울산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尹, “취약시설·계층 점검·지원 대책 필요”

### 무주서 발생 일가족 보일러 일산화탄소 참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일가족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망 사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취약 시설과 계층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혼자 사는 어머니를 보러 간 일가족 여섯 명이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여름, 재난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전제적 주민 대피와 위험 지역으로의 이동 통제’를 이야기했다”며 “올바른 사전 대응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재난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 대응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재난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얼마나 방화한지 알고 있다”며 “일선 공직자들은 겨울철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챙기는 데 보다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에 대한 제도화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전북 무주의 한 단독 주택에서 80대 노모와 40대 딸 부부, 30대 손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중독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는 3.2%

농협 양곡창고 중 농협이 소유한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는 단 3.1%뿐이고,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창고가 88.1%에 이를 정도로 농협의 양곡창고 시설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양립 창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협 양곡창고는 3,006동인데,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1,636동 중 저온양곡창고는 그중 3.2% 수준인 52동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양곡창고는 안전성·안정성을 보관의 모토로 삼는데, 양곡도 음식물이므로 100% 건조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처럼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 아래로 저온보관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말하며, “농협 소유 정부양곡창고 중 저온창고가 단 3.2%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오래 기간 동안 창고 인프라를 방치한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당신과MG의 랠리는 무궁무진!

꿈이 자라는 랠리는 흥미로운 경기를 만들 듯이 MG새마을금고가 금융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만들겠습니다.

MG새마을금고

## 김희수 전북도의원 재향군인회 감사패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제69주년 ‘재향군인의날’을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육군대장 김진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김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재향군인회에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고 재향군인회 발전과 향군조직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도와주셨기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원은 “특정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52년 창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세계 최대의 안보단체로 군복무를 필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 바로잡습니다

본보 10월 7일자 1면에 게재된 휴무 안내와 관련 ‘연휴 관계로 10일자까지 신문 쉽니다’에서 10일자를 11일자로 잘못 표기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자는 정상 발행합니다. 독자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도교육청, 공·사립 균형지원방안 마련을”

### 전북교총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 추가 지원 추가교육비 인상 좌초할 뿐”… 법인화 반대 표명

전북교총(회장 이기중)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국민 혈세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없이, 유아 무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전북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지난 7월 22일 “전북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지원을 고민한다면서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전혀 없이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 학비부담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유아교육 무상화는 출발선 교육의 공평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전북 국·공립유치원의 취입률은 37.8%로, 인근지역인 전남 5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의 특활비 등 추가교육비 인상을 좌초할 뿐”이라며 “법정 반대입장을 냈다”

이러면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 지원비 연간 1,500~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58만원, 교사차우개선편 월 74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원아수 감소,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시설개선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유아교육 개선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담보조치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없이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국공립유치원 유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

끝으로 이들은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월 13만5,000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 원아에게 동일한 금액의 유아교육지원비를 지원해 전북 전체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써 모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목은 유아 무상교육의 실현이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할 방향으로 환영할 만한이지만 유아 무상교육 실현에 투입되는 재원만큼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라는 것이다. /정은성기자